

“전세버스 망하면 기사 전체가 갈 곳 잃는다”

홍선기 기자 | 승인 2021.03.16

대구·광주 등 지자체선 업체와 기사에게 각각 지원
차량 할부 값을 갚을 길 없는 업체들 줄도산 위기 "구명" 호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봄이 오면서 전세버스업계는 더 울상이다. 봄이라고 해도 이전처럼 특수는 없고 고정비용 지출이 가중됨에 따라 번호판을 떼고 휴업에 들어가는 등 생존의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들은 지원의 목소리를 토포했다. 전세버스 기사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서울 지역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업체나 사업자에게는 지원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는 관내 65개 전세버스업체를 상대로 영업이익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중 50개 이상 업체가 시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평소 같으면 제출하지 않았을 전세버스업체들이 앞다투어 영업이익을 시에 공개한 데에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L관광 전세버스사업 부문은 매출액이 28억원(2019년)에서 지난해 5억원대로 급감했고, B 관광 전세버스도 78억원(2019년)에서 지난해 28억원대로 급감했다. 이처럼 50여개 전세버스업체의 매출액이 반 토막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기록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12월 기준으로 운송실적은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81% 감소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살면서 서울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기사 A씨는 지원을 받는 것이 힘들고, 주소지를 토대로 기사에게만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어려운 이유는 신차(버스)를 캐피탈로 뽑고 운송수입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인데, 코로나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체에도 직접 지원을 하거나, 대출 할부금 납부유예 및 이자 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간파한 일부 지자체에선 업체와 기사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업체가 망하면 고용된 기사들도 갈 곳을 잃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광역시도 업체엔 대당 15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원했고, 대구는 버스업체엔 대당 10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울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은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선기 기자